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

# 새 정부의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

2025. 8. 27. 수

9:30 ~ 12:00

국회도서관

소강당



#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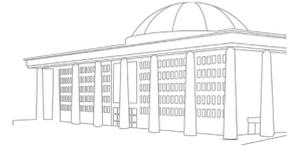
##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

- 일 시 : 2025.8.27.(수) 9:30~12: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강당
- 주 최 : 국회외교안보포럼
- 주 관 : 국회미래연구원
- 일정표

시간	내 용	주 체
9:30~9:45 (15분)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개회사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축사	김태년 한중의원연맹 회장
9:45~9:50 (5분)	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참석자
9:50~10:40 (50분)	<b>발제 1-1</b> 새 정부 한중관계의 비전과 전략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
	<b>발제 1-2</b> 한중관계 재정립을 위한 기회와 도전요인: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b>발제 2</b> 한중 경제관계 현황과 발전 방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장
10:40~12:00 (80분)	<b>좌 장</b> 정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b>토 론</b>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정은 동아일보 부국장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외교안보팀장	좌장 및 패널



# CONTENTS



##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

### 개회사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	3
--------------------	---

### 축사

김태년 한중의원연맹 회장 .....	7
---------------------	---

### 발제

#### **발제 1** ① 새 정부 한중관계의 비전과 전략

이희욱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 .....	11
---------------------------	----

#### ② 한중관계 재정립을 위한 기회와 도전요인: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	23
--------------------	----

#### **발제 2** 한중 경제관계 현황과 발전 방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장 .....	43
--------------------------------	----

### 토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정은 동아일보 부국장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외교안보팀장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



# 개회사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 개회사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장 김기식입니다.

국제질서 전환기, 미래 글로벌 리더십을 둘러싼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돌, 글로벌 리더십 변화, 경제·안보·외교 전반에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위기의 시대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와 번영, 글로벌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경제, 안보, 외교 등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거대한 변화와 복합적 위기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회외교안보포럼은 중대한 질서 전환기에 초당적인 한국 외교의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고자 국회와 학계, 언론계가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난 한미관계·한일관계 포럼에 이어, 이번 포럼은 <새 정부의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개최합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 한중관계는 미중 패권경쟁과 국제무역질서의 격변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파트너이면서, 동시에 국익외교의 관점에서 다양한 과제들을 안겨주는 외교대상국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포럼은 국내 최고 중국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들이 함께 신정부의 대중국 외교전략과 정책과제를 토론합니다. 이희옥 성균중국어연구소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이 발제를 통해 새 정부의 한중관계 외교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정종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정은 동아일보 부국장,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외교안보 팀장이 참여하여,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한중관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한중의원연맹 회장 김태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한중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국가가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의원님,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고, 한중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중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기 식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



# 축사



김태년 한중의원연맹 회장





김 태 년  
한중의원연맹 회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교수님들, 토론에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과 경제·외교·안보 분야의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의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을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국회외교안보포럼과 국회미래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AI·디지털 패권경쟁의 심화 등 복합적인 국제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중관계 역시 새로운 전략적 정의가 요구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외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부합하는 정교하고 유연한 전략 설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포럼 발족식에서 실용외교 복원, 산업경쟁력 강화, 포용형 개방국가라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세 원칙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한중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외교, 기술과 공급망 안보를 위한 산업 협력, 인재 흐름의 유연한 개방은 모두 지속가능한 한중관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국회 한중의원연맹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의회외교 플랫폼으로서 양국의 정치·경제·산업·문화 협력을 촉진해 왔습니다. 지난 6월 연맹

대표단은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해 중국 지방의회와 산업계, 학계 인사를 두루 만나 실질적인 정책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의원연맹이 전략적 소통 창구로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登高望远(등고망원; 덩가오왕위엔)”,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본다는 말처럼, 오늘 이 자리가 단기적 현안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제언이 향후 우리나라의 중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 김 태 년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



## 발제 1-①

# 새 정부 한중관계의 비전과 전략

이희욱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



## 새 정부 한중관계의 비전과 전략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

### 1. 총론

- 오늘날 국제질서는 패권의 축소가 이루어지는 시대임. 상대적으로 패권이 쇠퇴해 미국이 대전략 공약을 철회하고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줄이고 있음. 이런 점에서 한미관계도 변동성이 강화될 것이고 실제로 주한미군의 감축논의와 전략 조정(동맹의 현대화)을 시도하고 있음. 중국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공백을 파고들면서 담론력(discourse power)을 강화하고 <중양주변공작회의>를 통해 주변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사를 강화하는 등 ‘힘의 분산’을 추구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보면 한중관계도 양자 차원보다는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에서 포착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자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킬 의지와 힘이 없는 상태에서 가치외교(실제로는 이념외교와 진영외교)를 추진하기 어렵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한국의 편승전략을 극복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도 상황별, 이슈별로 기민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짐. 실용외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음. 향후 미국의 대중정책을 추진할 때, 중국의 대미 정책을 추진할 때 한국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수준에서 협력할 것인가를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함.
- 한중관계의 외부환경은 크게 구조, 국면,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조의 차원에서는 미중전략경쟁이 실제로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이 기대하는 바대로 “한중관계가 발전하면 미국이 한미관계 가치를 주목하지는 않을 것임. 국면의 차원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다루는 북한과 대만이슈 등 동아시아 이슈의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추진도 이러한 요소의 하나

임. 사건의 차원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선 이후난(先易後難)의 태도로 양자관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한중관계는 정책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며, 중국이 미래 혁신산업의 메카라는 점에서 협력이 필요함.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한중관계가 발전할수록 미국이 한국을 주목할 것”이라는 접근법이 등장하는 등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서로에게 너무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신뢰의 시간을 확보하고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라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2. 한국의 대중외교의 준칙

- 한중 양국은 글로벌 책임국가로서 국제와 지역의 평화와 협력에 기여함.
- 한중 양국은 개방적 무역질서를 지지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함.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호혜, 그리고 민간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함.
- (양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화,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3. 한중관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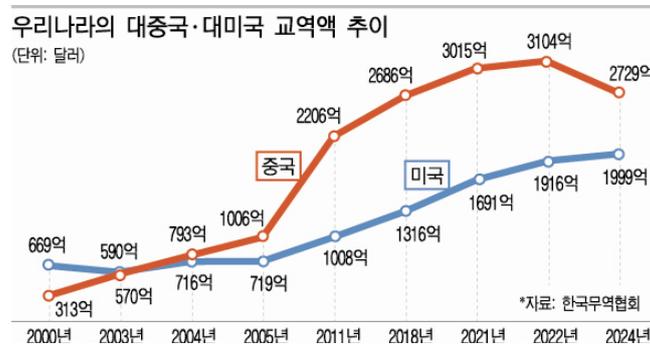
- 윤석열 정부의 한중관계와 대중정책: 미국의 대중정책 커플링
- 동맹환원론: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수록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시할 것임.
- 단계론: 한미동맹, 한일관계를 공고화한 이후 한중관계를 모색한다는 단계론적 접근을 통한 전략적 차등화를 시도함.

- 연계론: 북한과 대만문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함께 한국이 대만 해협의 현상변경에 반대함.
- 가치외교: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라는 한국외교 정체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만 문제, 인권 등 중국에 대해 가치외교를 추구해야 함.
- 윤석열 정부의 대중정책 평가
  -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한중이 2008년에 구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초한 한중관계 발전을 강조함.
    - 중국의 반발로 인해 2024년 5월 한중일 정상회의와 12월 한중정상회의를 계기로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절충함.
  - 대만 문제를 중국의 내정으로 보지 않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관점, 글로벌 이슈의 관점에서 접근함. 실제로 한-대만 민간교류를 상대적으로 강화한 바 있음.
  - 대북정책에 대해 엄격한 상호주의를 취했고 통일문제에 대해 ‘자유의 북진’과 같은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단절됨.
  - 탈중국론: 신냉전 구도의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라는 안미경미(安美經美)를 추진함.
    - 미국이 대중국 공급망 압박과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한국도 피크차이나(Peak China) 논리를 수용하면서 탈중국 정책을 강화함.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중국경제가 고꾸라지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중간 정치적 신뢰가 악화되면서 협력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음. 무역통상 부분에서도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미래 산업의 새로운 중심인 중국의 혁신을 과소평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상실함. 사회문화적으로는 코로나 19 영향이 있었지만, 상호 민간교류가 제한되어 상호 부정적 인식도 확대되었음.

#### 4. 신정부의 한중관계: 지속과 변화

□ 한중관계의 지속

- 한미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임. 이런 점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사이에서 엄격한 균형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임.
- 한미일 안보협력에서도 군사협력의 수준과 범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 협력의 틀은 유지할 것임.
-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높지만, 한미 관계와 NPT 체제 구속성을 고려해 전술핵 도입이나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
- 한중 무역통상 구조의 성격이 변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거나 균형을 이루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 주권과 영토 그리고 역사문제 등 한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전개할 것임.
- 한중의 상호 부정적 여론을 개선해야 하지만, 한중 청년세대의 부정적 인식 증가 등 현실적으로는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남아 있을 것임.

- 한중관계의 변화: 국익중심 실용외교
-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동시 발전: 과거에는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한중관계를 처리해 왔다면 새 정부는 비록 한미와 한중관계의 크기가 다르지만,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고자 할 것임.
-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외교형식의 복원: 이것은 중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지역과 국제문제에서 ‘전략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양국 관계를 ‘전면적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것은 부담요소임.
-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1953년에 체결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사실상(de facto) 중국을 겨냥하는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할 가능성.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중협력 모색: 현재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긴장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북한도 러시아로 난 기회의 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북중간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할 때, 북러관계가 북중관계를 대체하기는 어려움.
-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 극복: 북한은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두 국가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수록 한반도 비핵화 동력이 약화되는” 비핵화의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적 해결과제로 두고 중간단계에서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이런 점에서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북한정책의 공간을 확대하고자 할 것임.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국정과제 122>)

## 5. 새 정부 대중전략의 모색

- 일관된 외교안보 메시지 관리
- 주권, 영토, 역사 등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고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외교적 매몰 비용을 줄여야 함.
  - 이어도, 서해 불법조업 및 어획, 서해 EEZ, ADIZ 중첩,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대응이 필요함. 다만 서해 구조물 처리에

있어 비례적 대응조치를 통해 상호 민간 감정을 자극하기 보다는 다양한 정책 메뉴(공동개발, 공동조사, 공동관리 및 구조물 이동)를 조합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비핵화, 하나의 중국과 대만 문제, 한중관계 위상 문제,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숙의를 거친 일관된 메시지 발신이 필요함.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명분론적 접근 대신에 실질적인 신뢰 조치를 강화하면서 이를 증장기적 과제로 놓고 한중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조 대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정치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principle)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1992년 수교 공동성명) 고 밝히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넘어설 필요가 없음.

□ 한중 대화채널의 제도화와 내실화

○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의 복원과 제도화(“긴밀한 소통 통한 새로운 한중관계 구축”)

- 외교차관 중심의 전략대화, 외교와 국방부 2+2 외교안보대화, 해양협력대화 등 기존 대화채널의 정례화와 제도화 필요. 한중관계가 어려울 때도 가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북핵대응 조율, 위기관리 핫라인 확보, 대북 제재 관련 정보공유 등을 주요 의제로 하되, 탈북, 초국경 전염병 관리, 한반도 유사시 공동 대응 프로토콜 사전 협의.

-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통일부 중심의 한중 전략대화를 신설할 필요도 있음.

○ ‘한중 경제전략대화’(Korea-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설치해 양국의 복합안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경제안보 이슈 조율 및 공급망, 첨단기술 협력 등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구축

□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한중 협력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해 한중 함께 노력”)

○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공존의 제도화(〈국정과제 114〉)에 대한 한중 협력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지

- 현실적으로 CVID 방식의 비핵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 핵 확산,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한중 공감대를 확보하고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 유엔안보리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농업, 인도적 지원, 관광, 의료 부분과 연동된 남북중협력, 특히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대한 남북중, 남북러 관광협력에 대한 새로운 협력틀이 필요함.

-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운영 노하우 전수, 도로와 통신장비 등 인프라 개선 지원 등 협력모멘텀을 확보해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국정 과제 118>)를 추진

□ 한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중 미래산업 협력

○ 중국의 인공지능 전환(AI)을 활용한 한중 협력

- 한중 AI 관련 합자회사 설립, 중국의 AI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 용이성 확보

- 한국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즉 중국 빅데이터, AI 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이 준비 중인 제품·서비스를 조기에 검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산업구조 상호보완의 금융화를 위한 한중 공동지수 ETF 시범 출시

-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중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들을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묶어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금융상품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가 한중 양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기업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 공동지수 ETF를 개발해 동시에 상장한 사례가 있음).

□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

○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 양국 간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해 FTA 조항 개정과 서비스 분야 개방을 조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여행업과 온라인게임 등에서 비대칭적 규제가 존재함. 예컨대 한국 여행사의 중국인 아웃바운드 영업이 어렵지만, 중국 여행사는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임의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 진출 시 ICP 경영 허가증 취득 등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 다자간 경제통합체제 참여를 통한 정치리스크 감소

- 한국은 한중 간 정치적 갈등이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자간 경제통합 체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등 다자 체제의 제도적 장치(원산지 규정, 무역원활화 조치,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를 활용해 개별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이 전체 공급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과거 체결된 한중 협력사업의 지속과 재정비

- 과거 체결된 한중간 주요 MOU, 한중(창춘)국제협력 시범구 조성사업, 과학기술 공동센터 운영 등이 정권 교체 등으로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은 현황 파악과 사업 재정비가 필요

□ 인문교류의 활성화와 한한령의 실질적 해제

- 민족적 자부심(national pride)이 높은 한중 청년이 게임 등 온라인 환경에서 갈등을 증폭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 등에 대한 상호비자면제 조치를 통해 수학여행 등 청년간 경험 교류를 지방정부와 연계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국 플랫폼의 확산을 통한 한중 간 온라인 교류의 장 확대 및 건설적 교류 촉진 방안 마련

- 한중양국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없어 사회문화적 교류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중국은 VPN 없이 한국 젊은층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카카오톡(Kakao Talk)에 접근이 어려워 양국 소통의 장애 요소가 되었음.

○ 한중 유학생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우호적 인적 기반을 장기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최우수 인력을 상호 확보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절실함. 특히 한국과 중국의 과학 기술 분야 인적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 한한령 해제를 위한 문화교류, 엔터테인먼트, 게임, 여행, 소비재 시장의 대폭 개방을 통한 관계 정상화 필요
  - 한국의 브랜드 경쟁력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기반과 중국의 디지털 유통 노하우를 결합한 협력 모델을 발굴해, 향후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한중 양국 협력을 통해 중국 내 불법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중국의 소프트파워 증진과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의 원원구조 확보
  - 한중 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정례적 협의체를 운영하고, 법적, 행정적 공조 강화 필요성.
- 한국내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통한 혐오문화와 외국공관에 대한 시위 근절을 위해 외국사절 모욕죄(형법 108조 2항)의 엄격한 집행 및 제도 정비 필요함.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 1인 가구 증가, 소비의 개인화 등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공동해법 해법을 동시에 모색하는 프로그램 및 대화채널 마련이 필요함.
- 패키지 딜(Package Deal) 모색
  - 중국이 2026년 APEC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도 한국을 방문할 것임. 그동안 양국의 정상회담 부재가 한중관계 회복을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음.
    - 한중양국의 상호 필요한 조치를 교환하면서 이익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서해에 설치된 해상 구조물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조치, 한국의 독립운동 유적지 관리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접근,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한중협력, 새로운 공급망 협력 등 다양한 이슈를 묶는 것이 필요함.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



## 발제 1-②

# 한중관계 재정립을 위한 기회와 도전요인: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 한중관계 재정립을 위한 기회와 도전요인: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 1. 들어가며

- 이 글에서는 먼저 한중관계의 역사적 국면을 회고하고,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한중관계 재정립 국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함.
- 이어 한중관계의 현황 분석과 평가를 통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개선과 협력을 위한 기회요인과 해소 또는 관리가 필요한 구조적 도전요인들을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끝으로 이 글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성에 맞추어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함.

### 2. 한중관계의 역사적 국면과 ‘관계 재정립’의 의미

#### 2-1. 한중관계의 회고

- 한중관계는 1992년 8월에 수교를 체결한 이후 ▲발전기, ▲조정기, ▲갈등기를 거쳐 ▲관계 재정립의 국면에 진입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양자관계의 역사적 국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중관계 재정립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한중관계는 2016년 7월에 발생했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 배치 현안으로 인해 급속히 냉각되었음.
  - 이후 문재인 및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한중관계의 개선을 시도했으나 제한적인 성과에 머물렀음.

- 2025년 6월의 한국 신정부 출범은 한·중이 모두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양자관계를 개선시키고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사드 배치라는 양자관계 냉각의 직접적인 사안이 존재했지만, 근본적으로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점진적으로 변화해온 ▲양국의 종합국력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차이, ▲중국 산업 정책 및 구조의 변화, ▲중국의 대한국 정책의 변화, 그리고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한·중 간 구조적 도전요인들이 증가해 왔음.

- 따라서 2016년 7월 이후 한중관계의 냉각은 사드 배치 현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나, 한중관계의 역사적 국면으로 본다면 양자관계가 이미 갈등기에 접어들었음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던 사안이라 평가됨.

○ 따라서 한국은 한·중 사이의 종합국력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차이를 냉정하게 인식하는 한편, 동시에 미·중 전략적 경쟁이 장기화 구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중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한국 대중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분야별 구조적 도전요인에 대응하는 장·단기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시기임.

○ 한·중이 공식 선언한 양자관계의 발전은 ▲1992년 수교 당시 우호협력 관계(노태우 정부),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合作伙伴關係) (김대중 정부),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全面合作夥伴關係) (노무현 정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戰略合作夥伴關係) (이명박 정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음.<sup>1)</sup>

- 이후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모색했으며,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에 거리를 둔 시기를 경험함.

○ 하지만 이러한 단계적인 양자관계 발전의 선언과 구분은 한중관계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

- 예를 들어 2016년의 사드 배치 현안 이후 한중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고 현재까지도 완전한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016년 이후의 한중관계도

1)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한중관계" 한중관계와 중국  
 ([https://overseas.mofa.go.kr/cn-ko/wpge/m\\_1222/contents.do](https://overseas.mofa.go.kr/cn-ko/wpge/m_1222/contents.do), 최종 접속일 2025년 7월 25일)

여전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이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비해 현재의 한중관계가 협력이 한층 증진되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중관계의 역사를 발전기, 조정기, 갈등기의 시기로 구분하고, 갈등기에 접어든 한·중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와 국익의 충돌, 그리고 구조적 도전요인들을 국제정세의 냉엄한 현실에서 고찰해 보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sup>2)</sup>과 더불어 ‘한중관계의 재정립’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함.

## 2-2. 한중관계의 역사적 국면 변화

- **(한중관계 발전기)** 수교 이후 한·중은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정부 주도 및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한중관계에서 민간 분야로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문화, 정치·외교,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관계 강화를 추구했음.
- **(한중관계 조정기)** 발전을 거듭하던 한·중 우호 협력관계에서 점차 도전요인들이 발생하며 양국관계에서 흔들림이 나타나던 시기였음.
  - 양국 협력의 긍정적인 사례로 한·중은 북한의 핵개발에 함께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의장국을 맡은 6자회담이 2003년 8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2005년 9월에 열린 제4차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6개항의 ‘9·19 공동성명’이 발표됨.
  - 반면 2000년 6월에 마늘 분쟁 사건<sup>3)</sup>이 발생하며 한·중이 통상 분야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충돌이 나타났음.
  - 또 다른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이 2002년부터 ‘동북공정(東北工程,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역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 내 반중정서가 고조됨.

2) 국정기획위원회. “2.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참고자료 (2025년 8월 13일), P. 58.  
 3) 한국 정부가 2000년 6월에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자, 중국이 이에 대응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취한 사건임. 양국은 2000년 7월 31일 ‘마늘협상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중국은 한국 휴대폰의 수입중단을 풀고, 한국은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3만 2,000~3만 5,000kg의 중국산 마늘에 30~5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세이프가드 시한 또한 2002년 말까지 줄이기로 합의하며 분쟁이 타결됨.

- 2008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국민방문 기간 중 친강(秦剛)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2022-23년 중국 외교부장 역임)이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전 세계 또는 각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하며 중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음.
- 하지만 동 시기 한·중 양국 정부는 협력관계의 틀을 깨지 않으며 갈등 상황을 관리하려는 상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비판과 반대 속에서도 2015년 9월에 중국이 개최한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다시금 한·중 우호 협력관계의 증진을 추구했음.
  - ▶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통일 및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승절 행사의 참석을 통해 이를 추동하려 했으나,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비판과 우려가 나타났음.

○ **(한중관계 갈등기)** 2016년 7월 8일에 한국 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한중관계는 급속히 냉각됨.

- 한국 내 사드 배치 현안 이후 중국은 직·간접적인 단체관광 금지와 ‘한한령(限韓令)’ 조치를 실행함.
-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은 ‘3불’ 입장표명<sup>4)</sup>을 계기로 2017년 10월 31일에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한·중이 공동 발표하며 양국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중 우호정책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에 이르지 못함.
  - ▶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은 우호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치며 한반도의 비핵·평화 구축의 과정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함.
  - ▶ 하지만 ‘대국과 소국(작은 나라)’, ‘훈밥’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중국 저자세 외교에 대한 논쟁이 촉발됨.

4) 한국의 ‘3불’ 입장표명은 2017년 10월 30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통위에서 더불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내용임. 당시 강 장관은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역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음.

- ▶ 한복, 김치 등 양국 국민들, 특히 네티즌 간 문화적 논란이 발생하며 한·중 간 상호 호감도가 하락함.
- 윤석열 정부 시기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두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고 역내 주변국들과 갈등의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 우호적인 주변외교 정책을 펼치며 한국과는 실질적인 협력도 특별한 갈등도 만들지 않는 ‘원만한 관리’를 유지함.

### 3. 한중관계의 현황과 평가: 구조적 도전요인의 증가

- (정치 분야) 한중관계는 정치 분야에서 수교 이후 상호 목인되어온 가치, 체제, 정체성과 관련된 도전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정치 체제, 그리고 이러한 가치와 체제를 기반으로 한 양국 국민들 간 정체성의 차이는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양국 사이에도 존재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에서 이들은 주요 도전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아왔으나,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정치 체제, 그리고 이러한 가치와 체제를 바탕으로 한 양국 국민들 간 정체성의 차이가 새로운 도전요인들로 점차 부상하기 시작함.
- (군사·안보 분야)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며 동 분야에서 한·중 간 도전요인들이 증가함.
  -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계속해서 받아온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확대 및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해왔음.
  - ▶ 연이은 북한의 위성 및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 대북 억제력(deterrence)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함.
  - 반면 중국은 한미 및 미일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협력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안보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불만이 수면 하에서 누적됨.

- ▶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넘어 미국의 주도로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이란 우려를 가짐.
  - 당시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 한일관계 개선 ⇨ 한·미·일 협력 ⇨ 한·중 협력 확대의 ‘단계적 접근’을 모색해 왔지만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펼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단계적 접근에 대한 수용이 불가했음.
  - ▶ 만약 중국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접근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중 사이에서 고민하는 역내 국가들이 한국과 같이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중국에게 다가오더라도 중국이 결국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 이에 더하여 최근 ‘사실상 동맹관계’인 북·러 간 상호 협력과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양자 차원에서 중·러 및 북·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 고조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 북한보다 미국에 맞추어지자,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감소함.
  - ▶ 단, 중국은 북·러 협력에서 거리를 두고 있으며, 북·중 사이에 국제정세의 신냉전 인식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 구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 차이가 존재함.
- (사회·문화 분야) 한·중 간 사회·문화 교류는 2016년에 발생한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현안으로 인해 급속하게 감소한 이후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임.
- 정치 분야의 가치, 체제, 정체성의 차이와 중국의 애국주의 및 사상 교육 강화에 더하여 단오절, 한복, 김치 등 연이은 문화적 논란이 한·중 양국 국민 사이에 발생함.
  - 한·중 양국 국민들은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 ▶ Pew Research Center에서 2024년 7월에 발표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지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71%임. [c.f. 일본(87%), 호주(85%), 미국(81%), 필리핀 (64%), 인도(52%)]<sup>5)</sup>

5) Laura Silver and Gar Meng Leong. Most People in 35 Countries Say China Has a Large Impact on

- ▶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 2025년 6월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진 중국의 이미지는 부정적 인상이 66.3%, 긍정적 인상이 25.6%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에 대해 부정적 인상이 17.1%, 긍정적 인상이 77.5%와 비교해 본다면 부정적으로 표출됨.<sup>6)</sup>
- ▶ 중국 또한 2016년 한국 내 사드 배치 현안 이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단체관광을 포함한 중국의 대한국 사회·문화적 교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한국인들과 문화적 논란을 둘러싸고 오해와 갈등이 증가하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해서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 4.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대한국 정책 전망

### 4-1. 중국의 전통적인 대한반도 정책 기조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국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는 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평화로운 주변 환경의 관리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 경제·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 협력관계 유지를 추구해 왔음.
- 특히 중국은 한국을 ▲투자 및 기술 교류의 경제 협력 파트너, ▲대북관계 관리를 위한 일정 수준의 지렛대, 및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친중 또는 중립을 유도하려는 주변국가로 인식해왔음.
-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적대와 협력의 굴곡을 넘나든 대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군사력을 포함해 종합국력에서 미국에 열세인 중국으로서 북반을 ▲한반도에서 미·중 간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인식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일정 수준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대한국 지렛대 및 대미 협상 카드로의 활용을 모색해왔음.

Their National Economy. Pew Research Center (July 09, 2024).

6) 손열·박한수 편. "[EAI 여론브리핑]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동아시아연구원 논평·이슈브리핑 (2025년 6월 12일).

-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지만, 대미정책 하에서 동 원칙보다는 북한이 가진 미·중 간 전략적 완충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분명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 중국에게 북한이 가진 전략적 가치는 상승 중임.
- ▶ 따라서 중국은 만약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를 소멸시킬 수 있는 김정은 체제의 붕괴 또는 북한 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북중관계의 굴곡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생명선’ 공급을 견지하고 있음.
- ▶ 이로 인해 남북 교류의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4-2. 최근 중국의 대한국 정책 기조

- 최근 중국의 대한국 정책 기조는 크게 ▲국제사회, ▲동북아, ▲한반도에서의 의 미로 나누어 평가해 볼 수 있음.
- (국제사회)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속하면서도 경제적 이익 및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점차 미·중 사이의 주요 현안들에서 한국이 중립적 입장 또는 ‘전략적 모호성’이 증가하고, 한미동맹에서는 ‘전략적 자율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함.
- (동북아 지역) 중국은 한국에 대해 역내에서 전략적으로 우려하는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막을 수 있는 ‘악한 고리’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음.
- ▶ 이를 위해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앞세우며 한·중 협력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점차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로 이동하기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 중국은 대북 억제력 관련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이해하고 있지만, 한·미·일 협력에서는 한국의 이탈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명분의 약화, ▲북·러 밀착 및 동북아 진영화 구도의 부상을 막기 위해 한·중 및 한·중·일 협력의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한반도)** 중국은 한국이 자국의 대북정책에서 일정 수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남북관계 및 미국의 영향력 제한을 통한 중국 주도의 한반도 정세의 통제를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
- ▶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를 활용하며 자신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도 중국에 대해 자주적인 입장을 추구하는 한편,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다루기가 쉽지 않은 국가로 평가됨.
- ▶ 나아가 북한은 2024년 6월에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및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북한이 러시아의 파병을 단행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 이로 인해 중국은 남·북 균형정책을 견지하면서도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일정 수준의 북한에 대한 견제 또는 압박의 지렛대 보유가 필요한 상황임.
-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결국 중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자주적인 모습을 확대하고, 중국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며, 남북관계의 교류 확대에 나서는 것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

## 5. 한국에 대한 합의와 제언

### 5-1. 한국의 대중국 정책적 고려사항

#### (가) 한·중 정상 간 상호 방문과 회담의 필요성

- 윤석열 정부시기에 중국이 보여주었던 한·중 간 고위급 회담의 증가는 양자관계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중국의 접근은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나 협력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을 목표로한 것이기 보다는 ‘원만한 관리’ 차원으로 평가됨.
- 이로 인해 한·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교류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실무급 차원에서는 중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실질적인 협력의 논의가 정체되거나 성과를 이루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한·중 간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상호 협력을 통한 국익 증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구조적 도전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진행이 필요함.

○ 중국 내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개선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 정상 간의 논의와 결정이 필수적인 요인으로 판단됨.

○ **(한국 신정부 출범과 중국의 기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중국은 과거 한국에서 진보적 색채의 정부가 보여주었던 ▲미국에게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확대를 추구하고, ▲우호적인 대중정책의 추진을 기대할 것으로 평가됨.

○ **(2025 경주 APEC 정상회담과 2026 중국 APEC 개최 연계)** 최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가능한 선에서 한국사회의 우호적인 반응과 시 주석 방한의 명분을 쌓으려는 중국의 외교적 대응을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됨.

- 한국은 이를 활용할 필요성은 있으나, 중국의 이러한 접근이 근본적인 양자관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아닌 ‘방한 명분 쌓기’에 국한될 수 있음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함.

○ 한국 또한 2025 및 2026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중 사이에 증가되어온 구조적 도전요인에 대한 최고지도자 간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나) 신냉전 및 동북아 진영화 구도의 방지에 대한 한·중 공동 대응

○ 최근 국제질서의 신냉전 구도 인식과 동북아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에 대한 북·중 간 이해관계의 차이 및 전략적 불신이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동사안 관련 한·중 간 공통 이익의 공간 확대가 필요함.

- **(북한)**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인식하고 강조해왔던 김정은 체제는 2023년 ▲ 7.27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북한은 전승절로 명명)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을 초청하여 북·중·러 협력 모색, ▲9.13 북·러 정상회담, 2024년 6월에 푸틴의 방북 및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을 단행함.

- (중국)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이 미·중 간의 주요 현안에서 자국을 지지하고 중·러 및 북·중의 양자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은 환영하나, 다자적인 중·러·북 협력의 강화 움직임은 미국에게 한·미·일 협력 강화의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 ▶ 또한 중국이 가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은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으로 존재함.
- ▶ 2023년 9월에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하여 마오닝(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13 북·러 정상회담 하루 전인 12일에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한 논평에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사이의 안배(朝俄之间的安排,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문제이다)”로 언급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표출함.<sup>7)</sup>
- ▶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2024년 6월 19일에 열린 김정은-푸틴 회담에서는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자, 중국은 동 회담 다음 날인 20일에 린지옌(林剑)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북·러 협력과 조약 체결은 “북·러 사이 양자 협력의 일이며, 나는 평론하지 않겠다(朝俄之间的双边合作事宜, 我不作评论)”고 언급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견지함.<sup>8)</sup>
- ▶ 중국은 다자외교와 (강)대국외교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북중관계는 물밑에서 상호 불만과 불신이 증가해 왔음.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개선과 협력이 강화된다면 중국은 한반도에서 느끼는 전략적 영향력의 감소를 보완하는 한편,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 신냉전 구도와 동북아 진영화 구도의 부상에 대해 한·중이 함께 반대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중은 한·미·일 대 북·중·러 동북아 진영화 구도의 부상 가능성에 대응해 한·중 및 한·중·일 협력의 확대를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음.

7)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3年9月12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2023年9月12日).

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4年6月20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2024年6月20日).

(다) 중국의 동북아 지역 전략 하 한반도 전략의 실행 인식

- 한국은 중국이 이재명 정부에 대하여 우호적인 대한국 정책을 실행하는 것과 지역 전략의 실행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회색지대 전략을 실행하며 ▲남중국해에서 구단선 주장과 인공섬 건설, ▲타이완 해협에서 중간선 불인정, 그리고 ▲서해 상 ‘잠정조치구역(PMZ)’ 내 구조물 설치 및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내 중국 군용기의 빈번한 진입, ▲중화문명공동체의 확대 등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의 모색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정책의 상위 개념인) 중국의 지역전략 차원에서 계속 실행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한국은 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한·중 사이의 구조적 도전요인들을 가능한 해소 또는 관리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으나, 한·중 양자관계를 넘어 중국의 지역전략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성급하고 과도한 기대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5-2. 신정부의 대중국 정책 제언

(가) 한국 대중정책의 기본 틀 확립

-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 하에서 한국 대중정책의 기본 틀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sup>9)</sup>임을 확인하고 견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의 대중정책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유연한 전략적 위치 조정을 통한 실용외교에 바탕을 둔 국익 극대화 추구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
    - ▶ 특히 한국 신정부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확대와 ▲다자 외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또한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과 합의된 가치, 정체성, 국익의 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미·중 사이의 주요 현안별 구체적인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함.
    - ▶ 단, 한국의 국익에 대한 개념이 정부의 정치적 색채에 따라 외교적 접근, 정책 우선순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며, 향후 국익의 정책적 우선순위

9) 설승은. “대통령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 추진 중” 연합뉴스 (2025년 8월 5일).

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나)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의 구축

- (전략적 자율성의 논의 개시 필요) 한국에게 한미동맹의 공고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은 분명히 필요하나, 미중관계가 경쟁과 대화의 병행국면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미·중 사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한국 내 논의의 개시가 필요한 시기임.
  - 현실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비대칭 동맹 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가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 사실임.
  - ▶ 하지만 향후 한국이 미국에게 대중국 '전술적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전략적 자율성'과 관련된 대미정책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
  - 따라서 한국은 ▲EU의 '전략적 자율성', ▲ASEAN이 추구하는 '전략적 탄력성 (strategic resilience)',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의 대미 및 대중외교 행보, 그리고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sup>10</sup>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전략적 자율성의 유연한 경계 조정)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를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며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이 마주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다면 한국은 역외 균형자인 미국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필요함.
  - 단,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미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아닌 '자강(自強)'을 의미하는 '내적 균형'의 미진함을 채우는 '외적 균형'으로서의 역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전략적 자율성'과 장기적인 한국의 '자강' 계획 수립에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전작권 회수 및 미래전을 준비하는 첨단 과학기술 및 군사력 증강 계획을

10) Ha Nguyen. "Vietnam's 'Bamboo' Diplomacy Hailed for Balancing Between US, China" VOA (January 05, 2024); "Vietnam's 'bamboo diplomacy' shifts into higher gear" Reuters (March 7, 2024); 유현정. "미중 사이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현안과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596호 (2024.09.09).

포함해,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수출입 다변화의 추구가 필요함.

- ▶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며 한국의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 및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함.

#### (다) 한국 다자외교의 역량 강화와 활용

○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대중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양자외교는 물론 이에 더하여 다자외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한국은 다자외교를 통해 EU, ASEAN,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임.

- ▶ 특히 한국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EU 및 ASEAN과 다자외교를 통해 미·중 사이 주요 현안들에 관해 논의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은 다자외교를 통해 한국 사회가 합의한 가치, 정체성, 국익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 한·중 양자관계에서의 민감한 현안들을 다자외교를 통해 ‘제한적 손상’으로 풀어어나가는 모습이 필요함.

### 5-3. 한중관계의 현안별 도전요인 관리

#### (가) 정치·외교 분야

○ (‘가치’ 관련 다자와 양자외교의 구분된 접근) 한국은 대중정책과 관련하여 가치와 정체성 중심의 다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한·중 양자외교에서는 ‘가치’와 ‘주권’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에서 다자외교를 통해 한국의 입장에서 가치, 체제,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필요함.

- 하지만 한·중 양자관계에서는 중국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신장위구르자치구, 홍콩, 타이완 현안들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체된 메시지 관리와 현안에 따른 세밀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 중국의 비판과 직/간접적 제재를 고려한다면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다른 자유진 영국가들과 함께 분명한 한국의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하는 모습이 필요함.
- ▶ 반면 한·중 양자외교에서는 ‘가치’와 ‘국익’의 균형을 잡으며, ‘가치’와 ‘주권’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지방 대 지방 교류 확대) 한·중 간 중앙 대 중앙정부의 교류와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 대 지방 교류를 통해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틀에서의 전략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함.

- ▶ 특히 발전이 뒤쳐진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방 대 지방 차원의 경제 협력 검토가 필요하며, 중국 중앙정치 고위 지도자들이 발전이 더딘 중·서부 지역에서 지방 지도자로서의 행정 능력을 검증받는 경우가 많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나) 군사·안보 분야

○ (정례적인 한·중 전략대화 채널 구축)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중 사이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도전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한·중 간 다양한 전략적 채널의 재개와 확대가 필요함.

- 다양한 한·중 전략대화 채널의 확대는 물론 무엇보다도 ‘정례화’가 관건임.

- 수교 이후 한·중 사이에는 점진적으로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이 구축되었지만 갈등기에 접어들며 한·중 사이에 국익의 충돌 또는 갈등이 발생하면, 그간 구축되었던 전략대화 채널이 중단되거나 불규칙하게 개최되었음.

- 이로 인해 양국 간 시각의 차이와 갈등을 관리할 적절한 시간을 놓치거나 대화가 원활하게 유지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함.

- ▶ 특히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사이의 전략대화 채널의 정례화가 필요함.

○ (타이완 해협과 양안관계의 분리 접근) 한중관계에서 한국은 ▲양안관계와 ▲타이완 해협을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에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며 최근 타이완 해협이 역내 ‘화약고(flash point)’로 부상했으며, 한중관계에서도 민감한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중국은 국내문제인 양안관계에 대한 한국의 내정 간섭으로 해석하고 있어 한·중 간 분명한 시각 차이가 존재함.
- 따라서 한국은 ▲양안관계에서는 수교 이후 한국의 일관된 입장인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한편, ▲타이완 해협은 남중국해와 함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해상교통로’와 관련된 현안으로서 국제법과 질서에 따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 구조물 폐기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중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 ▶ 중국의 지역전략 차원에서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에서 나타나는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이 서해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중 해상경계협정 협상을 촉진해야함.

#### (다) 사회·문화 분야

- 정치 및 외교·안보 분야에 민감한 도전요인들이 존재한다면 민감도가 덜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단, 중화문명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K-Culture 및 중국 내 ‘한류’의 인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임.
    - ▶ 이로 인해 한국 측에서 요구해 온 직·간접적인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에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한국은 한한령 해제의 요구와 더불어, 정치적 부담이 적은 동양화, 서예, 바둑 등의 정기적 교류 확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한·중 청소년 및 차세대 지도자 교류)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민족주의적인 반감과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하에 장기적이고 정례적인 한·중 청소년 및 다양한 영역에서 차세대 리더들 사이의 교류가 필

요함.

- ▶ 한중관계와 같이 가치와 체제가 다른 공동체 간 깊은 상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력과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함.
- (한·중 고령화 사회 진입과 중장년층 교류) 한·중은 모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층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중·장년층 세대의 인적 교류를 통한 양국 협력의 확대가 필요함.
- ▶ 특히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와 더불어 중국과 AI, 양자컴퓨터,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connected car) 등에서의 전문가 교류가 필요한 국면임. /끝/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



## 발제 2

# 한중 경제관계 현황과 발전 방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장



# 한·중 경제관계 현황과 발전 방향

이승신

2025년 8월 27일

## 한중 경제 관계

### ◆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관계 발전

-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분야별 정책 협의 및 소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관계 발전
- 양국은 동아시아 가치사슬 내에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성장
- 지난 30여 년간 양국의 무역과 투자는 비약적 성장
  - 한중 무역액: (1992년) 64억 달러 → (2024년) 2,729억 달러, 약 43배 증가
  - 한국의 대중국 투자 잔액: (1992년) 2.1억 달러 → 956.6억 달러, 약 455배 증가
-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협력**은 양국 관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동력

## 한중 경제 관계 재정립 필요

KIEP 한국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 한중 경제관계의 구조적 전환기

- **(문제인식)** 한중관계는 지난 30여 년간 밀접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발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안보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구조적 전환기**에 당면
-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국이자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국가이나, 그 **의존성이 외교 자율성 및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 2024년 한국의 5대 수출국 비중: 1위 중국(19.5%), 2위 미국(18.7%), 3위 베트남(8.5%), 4위 홍콩(5.1%), 5위 대만(5.0%); 5대 수입국 비중은 1위 중국(22.1%), 2위 미국(11.4%), 3위 일본(7.5%), 4위 대만(4.8%), 5위 호주(4.7%)
- 특히, 트럼프 2.0 시기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며 **한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압력과 중국과의 경제 의존 간 딜레마**에 처함.

## 한중 무역투자 추이

KIEP 한국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 한중 무역은 수교 이후 30년간 연평균 14% 성장, 중국은 2대 투자대상국('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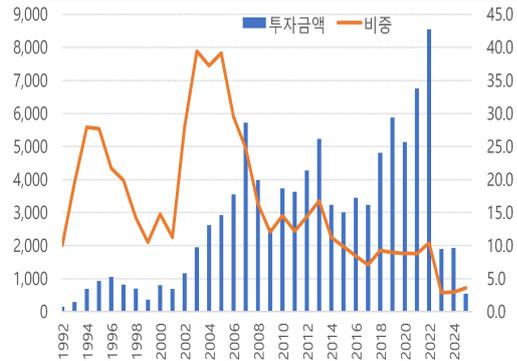
- **교역 품목 고도화:** 한국의 철강·화학·섬유 등 수출, 농·광산물 수입(수평적 분업) ⇒ 반도체 등 ICT제품 위주의 산업 내 무역(수직적 분업)으로 고도화
- **대중국 투자는 붐과 조정기를 거치며 성장, 2010년대 이후 LCD, 반도체, 자동차강판,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제조업 위주로 재편·고도화**

한국의 대중국 무역 추이

연도	대중국 교역 규모(억 달러)				중국 비중(%)		
	수출입	수출	수입	수지	수출입	수출	수입
1992	64	27	37	-10	4.0	3.5	4.5
2001	315	182	133	49	10.8	12.1	9.4
2018	2,686	1,621	1,065	556	23.6	26.8	19.9
2019	2,434	1,362	1,072	290	23.3	25.1	21.3
2021	3,015	1,629	1,386	243	23.9	25.3	22.5
2022	3,104	1,558	1,546	12	21.9	22.8	21.1
2023	2,677	1,248	1,429	-181	21.0	19.7	22.2
2024	2,729	1,330	1,399	-69	20.7	19.5	22.1
2025.6.	1,279	605	674	-69	19.9	18.1	22.0

주: 중국 비중은 한국의 전체 수출입, 수출,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K-stat, 한국무역통계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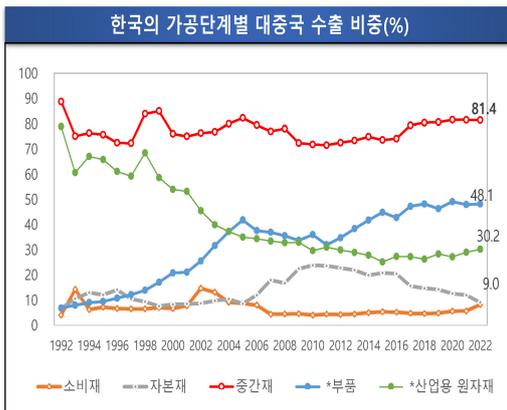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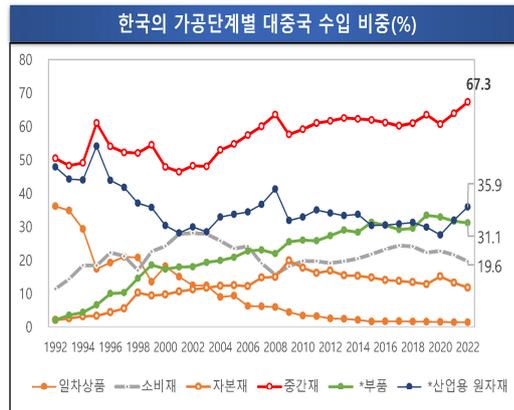
## 한중 무역 추이: 중간재 중심 교역



- ◆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은 중간재 비중이 압도적
- ◆ 중간재 중 특히 부품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 증가세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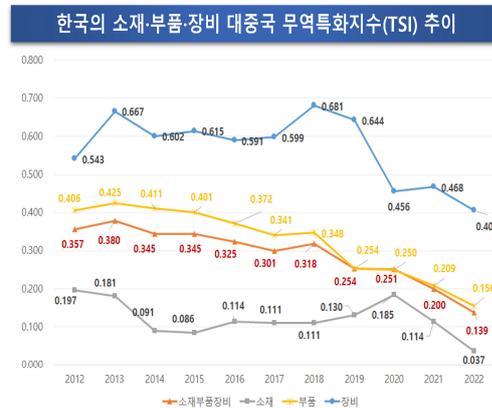
## 한중 중간재 무역구조 변화



- ◆ 한·중간 중간재 부문 산업내무역 심화
  - 중국은 한국의 주요 중간재 수출국이었으나, 최근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입이 빠르게 증가
  - 한·중간 중간재 산업내무역지수: 2022년 0.890 으로 2015년 대비 0.176 상승
- ◆ 한국의 대중국 소재·부품·장비 TSI 변화
  - 부품: ('12) 0.406 → ('22) 0.156, 소재: ('12) 0.197 → ('22) 0.037, 장비: ('12) 0.543 → ('22) 0.407

가공단계별 한·중 산업내 무역 비교						
구분	2015	2017	2019	2021	2022	'22-'15
중간재	0.714	0.692	0.775	0.814	0.890	+0.176
소비재	0.603	0.514	0.558	0.653	0.558	-0.045
자본재	0.773	0.964	0.999	0.874	0.712	-0.061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SOBUJANG.NET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 한중 무역투자 관계의 구조 변화

KIEP 한국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 양국 산업의 상호 보완적인 분업 구조 약화 ⇒ 경쟁적 협력

-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전환(2023년): 반도체 착시 효과, 반도체(HS8542) 제외하면 2021년부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
  - 제조업 무역수지 적자 전환: 자본재 적자 전환(2021년), 중간재 적자 전환(2023년)
  -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수출의존도를 상회 →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중간재 조달 시장
  - ✓ 수입증가: 중국산 소재 의존 확대, 중국과 밸류체인 심화, 중국의 가성비가 한국 생산 대체
  - ✓ 무역수지 급감 주요 원인: 배터리 소재(전구체, 양극재 등) 수입 급증에 기인
- 한중 경제협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왔던 在中 한국기업의 경영 악화, 대대적 구조조정
- 한국의 대중국 투자(반도체, 배터리) 규모는 여전하나 신규 법인 수 감소세
- 중국의 부품소재의 시장 및 공급처로서 한국에 매우 중요한 협력 상대국

## 한국의 대중국 투자

KIEP 한국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 (한→중 투자) 2018년 이래 투자금액 확대, 신규법인수 감소 추세 심화→ 2023년 부터 투자금액 축소, 신규법인수 증가세

-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중국사업 직간접 타격 및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기 악화와 경쟁력 상실에 기인
- 가전, 자동차, 휴대폰, 철강 등 업종: 대기업 및 동반 진출 중소기업들이 사업 매각/축소, 기존 사업 매각후 사업 전환, 신사업 투자 모색 및 확대 등 구조조정 진행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1~3.
신규법인수	834	723	737	695	538	490	468	244	262	190	203	275	56
투자금액	5,233	3,227	3,004	3,442	3,225	4,806	5,865	5,112	6,731	8,538	1,890	1,929	54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 중국의 대한국 투자



### ◆ (중→한 투자) 中國의 對韓國 投資 꾸준히 유입

- 기존: 무역업, 금융업, 부동산, 콘텐츠 및 일부 제조업 중심의 제한적 투자
-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신산업 분야 해외 M&A 확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 우회 등으로 새로운 기회 모색 가능성
- ✓ 지리적 인접성, 한중 FTA 양허 규정, RCEP 누적 원산지 규정 등

중국의 대한국 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1~6.
건수	237	308	400	444	306	295	357	200	397	365	494	523	275
투자금액	229	319	1,774	481	202	791	189	228	360	212	305	521	126

주: 투자금액은 도착액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 한중 무역투자 관계 및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 ◆ 국제통상 패러다임 전환 영향

-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 전략적 경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한중 무역투자 관계에도 영향
  -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위기
  -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대두
  -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탄소중립 등 글로벌 대전환
- 글로벌 공통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 부상
- 무역투자 관계 변화 및 한중 경제협력도 새로운 국면

## 국제통상의 패러다임 전환

KIEP 한국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 무역자유화(세계화) ⇒ 기술패권경쟁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존의 국제통상체제 및 세계화 확산 방식에 대한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요구 대두
- 공급망: 효율성(outsourcing, offshoring) → 안정성(insourcing, onshoring & reshoring); 강건성(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중시

### ◆ 신자유주의 ⇒ 자국중심주의

- 경제주체 및 메커니즘 변화: 기업과 시장 중심 ⇒ 정부의 적극 개입과 산업정책
-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경쟁 심화, 산업정책의 부활: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 제한
  - 핵심 산업, 기술, 원자재 확보 경쟁 심화,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연계
  - 글로벌 공급망 분할 및 블록화(friends-shoring, ally-shoring): 디리스크잉(de-risking)?

### ◆ 무역협정과 협상 ⇒ 전략적 경쟁과 선택적 협력

- 국내 정치와 글로벌 공통 과제 대응의 상충 문제

## 한중 경제관계 발전 방향

KIEP 한국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 한·중 경제협력 패러다임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환경 및 양국 무역투자 관계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함
- ✓ 한·중 경제 관계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점
- ✓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전략 수립과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
- ✓ 안정적 글로벌 통상 환경 조성은 양국 공통의 목표
  - 규범에 입각한 국제통상 질서 확립,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
-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양국 간 협력 수준 확대, 한중일 FTA 협상 재개, RCEP에서의 협력 강화 등 양자 및 역내 다자간 협상 적극 활용
- ✓ 글로벌 대전환기의 한·중 경제협력 방향:
  -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 기존의 제조업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과 디지털 및 서비스 분야로 협력 확대

##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발상의 전환 및 新 경제협력 구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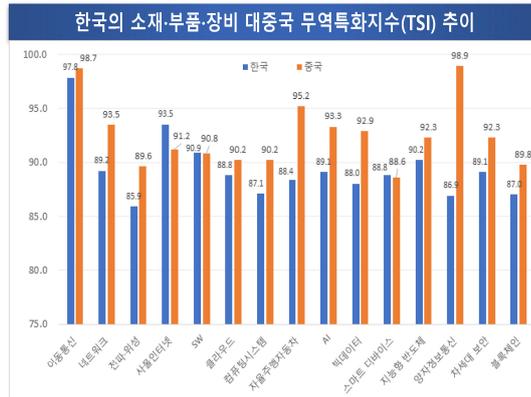


### ◆ 첨단기술 및 산업협력 고도화

- 기존의 제조기지로 보았던 중국을 이제는 ICT 등 **신산업 분야의 선진국**으로 보고 **경협 구도 구성**
- (ICT 주요 분야별 한중 기술 비교) 네트워크, 전파·위성,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자율주행차, AI, 빅데이터, 양자정보통신, 차세대 보안, 블록체인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국의 기술수준이 높음.
- ✓ 한중 산업과 기업 사이에 경쟁적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과잉설비 방지, 공정한 경쟁질서 구축, 다자체제 재편, 디지털 경제규범 마련, 기술 및 산업 표준 논의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 필요

ICT 평균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기술 수준	89.6	100	88.5	91.8	93.7
기술 격차	1.1	0.0	1.2	0.8	0.7

주: 세계 최고 기술수준 보유국인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을 100, 기술격차를 0년으로 함.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 2021 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 p.14의 표를 인용.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 2021 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 p. 16의 표 내용을 이용하여 작성.

## 지역 맞춤형 한중 경제협력 전략 구성 필요\_1



### ◆ 중국의 지역 맞춤형 산업정책 강화

-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핵심 광물 및 원자재의 주 공급처로서 한중 경제협력의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접근 필요**

- 기존 협력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또는 특정 산업군 중심의 협력에 집중
- 중국의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 변화 및 산업 발전의 흐름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중국: 31개 광역 성·시(省·市)로 구성, 각 경제 규모는 주요 국가의 규모와 유사한 수준
- ✓ GDP 규모가 가장 큰 광둥성과 2위인 장쑤성은 세계 12위 경제 규모인 한국을 소폭 상회
- ✓ 산둥, 저장성의 경제 규모도 1조 달러를 상회하여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경제 규모
- ✓ 주요 성·시별 1인당 GDP: (2024) 베이징 31,685달러, 상하이 26,883달러(2023년 기준)
- ❖ 중국의 지역별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국과의 협력 방안 마련에 긴요

중국 주요 성·시와 주요국의 GDP 규모 비교(2024, 10억 달러)

중국 주요 성시		비교대상국		중국 주요 성시		비교대상국			
순위	성시명	GDP	국가명	GDP	순위	성시명	GDP	국가명	GDP
1	광둥	1,968.3	한국	1,875.2	17	충칭	447.4	덴마크	450.5
2	장쑤	1,904.0	한국	1,875.2	18	윈난	438.2	말레이시아	424.4
3	산둥	1,369.8	인도네시아	1,396.3	19	광시	398.1	이집트	401.0
4	저장	1,252.6	사우디아라비아	1,239.8	20	네이멍구	365.7	칠레	347.0
5	쓰촨	899.1	폴란드	914.6	21	산시(山西)	354.3	칠레	347.0
6	허난	883.7	폴란드	914.6	22	구이저우	315.0	핀란드	308.4
7	후베이	834.0	대만	797.2	23	신장	285.4	말레이시아	286.3
8	푸저옌	802.7	대만	797.2	24	텐진	250.5	헝가리	246.7
9	상하이	749.4	대만	797.2	25	하이난	229.0	카타르	222.9
10	후난	739.8	대만	797.2	26	지린	199.6	카타르	222.9
11	안후이	703.5	벨기에	663.9	27	간쑤	180.7	모로코	162.9
12	베이징	692.7	벨기에	663.9	28	하이난	110.3	스리랑카	106.9
13	허베이	660.5	벨기에	663.9	29	닝샤	76.5	아제르바이잔	76.0
14	산시(陝西)	493.9	베트남	483.1	30	칭하이	54.9	튀니지	53.4
15	장시	475.3	필리핀	476.3	31	시장	38.4	조지아	36.3
16	랴오닝	453.2	덴마크	450.5					

주: 중국 GDP 통계는 위안화 기준 금액을 2024년 대미 평균환율(1\$=7.1958)로 나눈 것임.

자료: CEIC 중국 통계, 세계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 지역 맞춤형 한중 경험전략 구성 필요\_2

KIEP 대한민국경제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 중국: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제 구조 고도화 및 균형 발전 동시 추구

- ▶ 장강삼각주(상하이, 저장, 장쑤)는 디지털 경제와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성장 중
- ▶ 주강삼각주(광둥, 선전 등)는 혁신창업, AI, 전기차 중심의 세계적인 기술 허브를 지향
- ▶ 서부 내륙(청두, 충칭, 시안 등)은 신산업 육성과 외자유치를 통해 발전 격차 해소에 집중

### ◆ 중국의 산업정책은 점점 지역별 특성과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화

#### ▶ 이에 따라 한국의 對中 경제협력 전략 역시 지역 맞춤형으로 재구성될 필요

- 최근 중국 정부는 2025년 양회를 통해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육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AI+, 디지털경제, 첨단제조, 기술인재 양성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확대
- R&D 투자 집중도가 높은 베이징(6.7%), 상하이(4.3%), 광둥(3.5%), 장쑤(3.3%), 저장(3.2%) 등을 중심으로 산업 혁신 정책 추진이 강화될 전망

중국의 주요 지역별 R&D 지출 및 비중(백만 위안, %)

	R&D 지출	비중	R&D/GDP
중국(2024)	3,613,000	100.0	2.7
중국(2023)	3,335,707	100.0	2.6
광둥	480,262	14.4	3.5
장쑤	421,229	12.6	3.3
베이징	294,707	8.8	6.7
저장	264,019	7.9	3.2
산둥	238,602	7.2	2.6
상하이	204,960	6.1	4.3

자료: CEIC

## 한중 경제협력 방안

KIEP 대한민국경제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 한중 무역과 투자의 '안정적 성장동력 확보'라는 공동의 지향점 설정

- ✓ 현재 한중 무역과 투자는 이미 성숙기에 진입, 많은 제약으로 인해 확장성도 제한

- 1) 상호 개방적 무역과 투자 환경 조성
- 2)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 조성 및 확대
- 3) 전통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방식 모색
- 4)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공동노력 강화 필요

### ◆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관련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필요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중관계는 협력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큼.

- ▶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에서 협력 방안 모색, 디지털 통상 대화 채널 구축 등
- ▶ 디지털 및 환경 관련 상품의 무관세화 및 투자 자유화 추진 방안 모색
- ▶ 탄소 배출 저감 및 저장 기술 협력, 배출권 거래 협력
- ▶ 탈탄소화 관련 장비와 상품, 미래형 에너지 및 신에너지 자동차

- 예: 한국은 중국의 수입특화(도입기) 및 수입대체(초기 성장기) 단계의 신산업에서 협력기회 발굴; 디지털, 바이오 신약, 공업 SW, 수소연료, 로봇, 의료기기 및 서비스

## — 통상 마찰 대응 체제 구축



### ◆ 위기 대응 및 다자 협력 플랫폼 연계

- ✓ (통상·외교 마찰 대응 매커니즘 구축) 중국의 '비공식 경제 제재' 사례를 볼 때, 비정형적 제재 대응 필요
  - 비공식적 보복에 대응이 가능한 '비상경제외교 대응팀' 및 '경제안보컨설팅 센터' 구축
- ✓ RCEP, 한중일 회의 등을 활용한 다자적 연계 강화
  -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역할 강화
  - RCEP 내 기술·환경 협력 분야의 실질적 성과 도출 위한 한중 공동 의제 설정

**감사합니다**







# 토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정은** 동아일보 부국장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외교안보팀장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

# 새 정부의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